

해방 후 한국인 식자층의 탈식민 담론과 역사서사 구성의 변화

김태웅 (서울대)

1. 序言
2. 脫植民 談論의 등장과 歷史敍事의 재구성 : 1945~1948
3. ‘中共’ 談論과 二分主義의 등장 : 1949~1964
4. 韓日關係의 새로운 摸索과 韓國史의 體系化 문제 : 1965~1981
5. 韓日 歷史葛藤과 民主化運動의 連鎖 : 1982~2001
6. 한국의 政治的 民主化 道程과 <동아시아사>의 탄생 : 2002~현재
7. 結語

1. 序言

해방 후 현재까지 한일관계는 롤러 코스터(roller coaster)처럼 극과 극을 달리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한국사회가 탈식민화와 냉전 질서를 거치는 가운데 분단과 전쟁, 산업화, 민주화, 남북 관계의 변화 등으로 인해 일본사회와 달리 급격하게 변동하였으므로 이러한 롤러 코스터는 예견되었는지 모른다. 그것은 국내 정치와 국제 외교가 결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일관계에 잠복되었던 어두운 과거의 그림자에 대한 재조명이 한일 양국 학자들의 자료 발굴과 정리에 힘입어 본격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양국 관계의 이러한 롤러 코스터는 자국내 역사 서술의 구성 및 한국사/동아시아사 역사교육에 영향을 미쳤다. 탈식민을 바라보는 시대적 상황과 집권층의 시각, 그리고 식자층의 한일관계 인식 등이 당대 국내외 당면 과제와 맞물려 결코 일관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정치권은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학계와 교육계에 맡겨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직접 개입하여 교

육현장을 혼란의 도가니에 밀어넣곤 하였다.

이 발표는 한국 정국의 변동과 탈식민화의 과제가 상호 연동되는 가운데 일어나는 歷史敍事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서사의 再構成과 그 의미를 추적하였다. 특히 역사 교과서와 이를 뒷받침하는 교육과정의 변화에 중점을 두었다. 그것은 이들 역사 교과서가 역사서사의 구성을 內藏하고 일상 속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具現하고 있기 때문이다.

2. 脫植民 談論과 歷史敍事의 재구성 : 1945~1948

1945년 8월 15일 한반도는 일제로부터 해방됨으로써, 신국가를 건설하고 자신의 문화를 재건하며 빼앗긴 역사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른바 탈식민화의 가능성을 열게 되었다. 대다수 식자층은 新國家建設에 이바지하기 위해 학술·교육 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특히 日帝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청산이 대단히 중요했다. 그것은 탈식민을 위한 역사서사의 재구성이자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이었다.¹ 그래서 역사서사는 민족적 수난 및 침략적 역사의 청산에 초점을 맞추어 단일민족 국가를 구상하고 被壓迫民族들의 연대에 입각한 윤리적 아시아를 전망하기도 하였다.² 그러나 역사서사는 虛構的 想像에 기초한 文學과 달리 어디까지나 사실에 입각하여 구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역사서사의 이러한 구성과 재생산은 학계보다 교육계에서 먼저 이루어졌다. 왜냐하면 신국가건설의 문화건설과 집단 기억의 재구성은 학문적 성과에 앞서 국민교육이 우선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일본어와 일본사에 부속된 한국어와 한국사의 분리·독립이 급선무였다. 朝鮮語學會와 震檀學會가 각각 1945년 12월과 1946년 5월 □初等國

¹ 역사서사는 문학 및 신화와 달리 1차 사건들은 허구가 아닌 실제 사건을 의미한다. 다만 역사서사는 문학이 개발한 플롯 유형을 취하고 한 문화가 수합한 과거 사건들에 형태를 부여하여 2차 의미 유형으로 변환시킨다. 이에 관해서는 Donald E. Polkinghorne, 강현석 외 공역, □내러티브, 인문과학을 만나다□, 학지사, 2009, 137~138쪽; 梁豪煥, □歷史敍事의 立論과 構想□, 책과함께, 2012, 193~207쪽 참조.

² 하신애, 「해방기 역사서사의 탈/식민성과 新生 아시아의 상상—金東仁을 중심으로」, □동아시아문화연구□ 81, 2020.

語教本□과 □中等國史教本□을 간행했다. 후자의 범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민족문화·국가사회의 변천발전의 대요를 될수록 간명히 서술함에 힘썼”다. 그리고 ‘국사학습의 의의’를 “우리 민족 및 문화의 전통과 발전에 대한 인식을 깊게 하고, 민족성의 본질을 체득하여 건전한 국민정신과 국민적 도덕 및 정조를 배양함”이라 규정하였다. 즉 역사 교과서에 깔린 敍事는 민족국가 건설이라는 시대적 과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기존의 일본사 교과서와 비교하면 <표 1>과 같다.

<표 1> □국사교본□(1946)과 □중등역사□ 2(1944)

국사교본	중등역사 2(1944)
제1편 상고(태고, 삼국시대)	제1편 태고(天照大神부터 다이카 개신까지)
제2편 중고(신라 통일기 - 고려)	제2편 고대(다이카 개신부터 헤이안시기까지)
제3편 근세 (이씨 조선)	제3편 중세(가마쿠라 막부부터 에도 막부이전까지)
제4편 최근(국기 4243 - 4278년, 서기 1910 - 1945년)	제4편 근세(에도 막부부터 메이지 유신 이전까지)
	제5편 현대(메이지 유신부터 국제연맹 탈퇴까지)

주체는 한국인의 역사로 바꾸었지만 시기 구분과 내용 구성은 □국사교본□과 □중등역사□가 대동소이하다. 그것은 한국사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지 않은 가운데 일본사의 틀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반면에 동·서양사를 담고 있는 1944년도판 □중등역사1□은 <표 2>와 같다.

<표 2> □中等歷史2□(1944)

전편	후편
1. 고대의 아시아	1. 상고의 구주
2. 아시아 諸民族의 교섭	2. 歐洲社會의 성립
3. 아시아 諸文化의 興亞	3. 歐洲의 전환
4. 아시아 諸民族의 활약	4. 近世 諸國家의 발달
5. 근세의 동아	5. 歐洲의 혁신
	6. 歐洲의 세계 정책

그런데 이러한 동·서양사는 일본사를 염두에 가르쳤다.

□中等歷史1□의 序說인 ‘皇國과 東亞 및 世界’에는 다음과 같이 학습목표와 방향이 제시되어 있다.

‘동아 및 세계’의 역사는 이것을 동서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먼저 전편에서 황국 이외의 대동아의 역사를 배우고 다음 후편에서는 주로 구미의 역사를 배운다. 게다가 양자를 밀접한 관련을 근간으로 학습할 때 세계에 동아의 과거와 현재는 적확하게 파악되어 皇國進展의 배경 또는 선명함을 얻을 수 있다. 황국민은 동아 및 세계의 역사를 배울 때 항상 이 학습목적에 있어서 안된다.³

이를 통해 동·서양사를 다루는 학습목표가 ‘皇國進展’ 즉 大東亞戰爭의 배경과 그 당 위성을 아는 것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황국에는 朝鮮史도 포함된다.

역사교과의 이러한 三分主義는 해방 후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敎授要目 時期 이전이라 할 긴급조치 시기에 저술된 金庠基·金一出·金聖七의 □新東洋史□(1948)는 그러한 동아시아사 구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머리말에서 敍事 構成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國史에서 관련된 사실은 할 수 있는 대로 相互關係에서 자세히 敍述하여, 국사와 동양사의 연관성을 밝히려고 힘썼음.

³ 文部省, □中等歷史1□, 中等學校敎科書株式會社, 昭和19年(1944) 8月 13日, 4~9쪽.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동양사에서 일본사는 제외되어 있다. 동양사의 의의 및 범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동양사라는 것은 우리의 이웃 나라인 중국을 중심으로 하여,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진 여러 나라와 민족의 흥망에서 밝히는 것이다.(국사에 관한 사실은 다만 이웃 나라와 관련을 가진 것에 한하여 들게 됨)

그리고 동양사의 지리적 범위는 대개 시대를 따라 넓어져 가므로, 일률적으로 들기 어려우나, 대체로 보아 인도로부터 중앙아세아 동남부에 이르는 선을 기준으로 하여, 그 동쪽에 뻗어 있는 대륙 일대와, 태평양 방면에 흩어져 있는 여러 섬나라들을 이 범위에 넣을 수가 있는 것이다.⁴

次例를 보면 동양사 교과서임에도 중국사 일색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근대에 들어와 프랑스의 베트남 침략, 인도와 베트남의 독립운동을 서술하고 있다. 다만 일본은 ‘아메리카와 일본’, ‘淸日戰爭’, ‘俄日戰爭(러일전쟁)’에서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다. 또한 明末 시기 北虜倭亂을 언급하면서 ‘東洋의 倭亂’이라는 소주제 단원에서 倭寇와 豐臣秀吉이 동양의 삼국을 뒤흔든 장본인으로 서술하고 있다. 일본 전근대를 포함한 通史라기 보다는 일본의 침략에 초점을 두고 한일관계사 수준에서 서술하고 있는 셈이다. 해방 후 탈식민과제 속에서 역사학계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앞두고 일제가 자신을 東洋平和의 수호자로서 주조한 틀을 깨뜨리고 일본을, 동양평화를 깨뜨린 장본인으로 서술함으로써 歷史 敘事의 逆轉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인 10월 崔南善이 저술한 中等國史, 朝鮮本位中等東洋史 등이 李光洙의 文章讀本과 함께 文敎部로부터 사용금지 처분을 받았다.⁵

물론 중국 중심의 역사 서술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⁶ 1949년에

⁴ 金庠基·金一出·金聖七, 『新東洋史』, 同志社, 1948, 1쪽.

⁵ 「문교부, 전국중등학교 교장회의에서 친일파 교과서 사용금지 등을 지시」, 『조선일보』 1948.10.12.

: 「教科書와 風紀取締 등 學制最後決定」, 『朝鮮日報』 1948.10.12.

⁶ 孫晉泰·李海南, 『이웃나라 생활(역사부문)』, 탐구당, 1952, 머리말. 이와 관련하여 유용태, 「한국의 동아시아사 인식과 구성: 동양사 연구 60년을 통해서 본 동아시아사」, 『역사교육』 107, 2008, 140~143쪽.

출간한 □이웃나라의 생활: 역사□의 경우, 중국의 상대화가 두드러졌다.⁷ 그러나 탈식민이라는 긴급한 과제에 비한다면 일본사의 비중을 높일 수는 없었다.

중학교의 경우, 1학년에서는 「이웃나라(동양사)」, 2학년에서 「먼나라(서양사)」, 3학년에서 「우리나라(국사)」를 이수하도록 하였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일본사는 철저히 배제되었다. 최남선의 □이웃나라 역사□의 경우, 중국사 중심의 역사서나 다름 없었다. 해방직전의 동양사가 일본 중심의 동양사였다면 이제는 중국 중심의 동양사로 변환한 것이다. 즉 일본 중심의 위계질서형 연대론에 입각한 동양사에서 이제는 중국 위주의 위계질서형 문화론에 입각한 동양사로 바뀐 것이다.⁸ 나아가 동양사는 고등 예비고시 필기 과목 중 선택과목으로 서양사와 함께 시험과목에 포함되었다.⁹

이제 일본사, 동양사, 서양사라는 1945년 8월 일제 역사교육의 기존 三分主義를 이어받되¹⁰ 일본이 주류를 차지했던 기존 역사 서사의 구성에서 일본을 탈락시키고 그 자리에 한국사를 代入·配置하였을뿐더러 동양평화 담론을 피침략자의 처지에서 재정립한 것이다. 그 점에서 이러한 서사 구성은 일제에 주도되었던 一國 中心의 역사서사를 基軸으로 형성된 삼분주의가 무의식적으로 승계된 결과이다.

3. ‘中共’ 談論과 二分主義 구성의 등장 : 1949~1964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되었다. 이 사건은 일제의 패망에 못지 않게 동아시아사와 세계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건이었다. 후일 제3차 세계대전을 초래할 수 있는 이른바 韓國戰爭의 起源이 여기서 마련된 것이다. 물론 냉전질서의 등장과 심화가 이러한 전쟁을 일으키는 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한반도의 분단과 이어진 좌우갈등 그리고 중국의 國共內戰과 중국공산당의 승리는 냉전질서 고착화 이상으로 전쟁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이승만 정부는 중국을 한국의 북진통일을 가로막은 ‘中共 傀儡’로 호명했다. 反共主義와 北進統一論에 입각한 ‘中共’ 談論이다.

⁷ 유용태, 위의 논문, 142~143쪽.

⁸ 전시체제기 지식인의 東洋談論에 관해서는 尹詳鈞, 「1950년대 知識人들의 民族 談論 연구」,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3, 36~40쪽 참조.

⁹ 「고시위원회, 국가 고등고시 실시에 따른 시행규칙을 마련」 □東亞日報□ 1948. 10. 11.

¹⁰ 대한제국 시기 정부는 本國史와 萬國史라는 二分主義에 입각하여 역사서사를 구성하였다.

그리하여 한국 정부의 집권층은 중국에 대한 二重意識을 견지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대륙을 점령한 ‘중공’에 대해서는 반공주의에 입각하여 傳統 中國으로부터 분리시키며 타이완에 대해서는 反共의 堡壘로서 連帶하는 가운데 타이완과 전통 중국을 연계시켰다. 역사 서사의 재구성이 공간과 시간의 분리였던 셈이다. 그리하여 현실에 존재하는 중국 대륙은 역사와 분리된 채 타이완으로 表象되는 동양사의 공간으로 자리잡았다.

한편, 1950년대 사회과학계 자유주의 계열 지식인들이 “인류문화”에의 공헌과 “後進性的의 극복”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주류로 올라섰다. 그것은 후진적인 동양이 문명사적으로 선진적이었던 과거와 현재의 자유 건설의 중심이라 할 서양을 따라 배움으로써 후진성을 극복하고 자유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¹¹ 사회학자 李相佰의 경우, “서구화가 곧 현대화”라고 주장할 정도였다. 물론 이러한 東洋談論에서도 일본 한 나라는 겨우 후진성을 면한 나라라고 평가하였다.¹² 이러한 논의는 아시아적 停滯性으로 연결되었다. 심지어 경제학자 裴成龍은 비트포겔(Karl August Wittfogel)의 영향을 받아 ‘중공’과 소련을 東洋的 專制政治로 규정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역사학자 金龍德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이러한 국가권력의 특성으로 시민계급이 성장하지 못해 정체하였다고 주장하였다.¹³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을 받은 경제사학자마저 아시아적 생산양식론을 수용하고 있었다.¹⁴ 그 결과 이러한 동양적 정체성론은 탈식민 담론으로 나아가기 보다는 오히려 南韓 改造의 필요성(후진성)을 역설하기 위한 修辭的 方法的 裝置에 지나지 않았다. 물론 훗날 중국사 연구자 일각에서는 전통 중국과 현실의 중국을 연계시키며 내재적 역량을 중시하는 흐름도 나타났다.¹⁵ 이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을 근대화실의 실패가 아닌 ‘중국적 근대화’의 실현으로 인식하였다. 아울러 이런 흐름에서 일본의 內在的 發展을 重視하기도 하였다.¹⁶ 그러나 동양적 전체주의 이론이 후진성 이론과 결합되어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은 찻잔의 微風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자유당 정권 내부에서 전체주의적 민족주의 계열인 族靑系가 제거

¹¹ 윤상현, 앞의 논문, 91쪽

¹² 윤상현, 앞의 논문, 140~144쪽.

¹³ 金龍德, 「국사의 기본성격-우리 사회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思想界』 1953년 9월호, 53쪽.

¹⁴ 김용섭, 『역사의 오솔길을 가면서-해방 세대 학자의 역사연구 역사강의』, 지식산업사, 2011, 98쪽.

¹⁵ 정문상, 『중공, 자유중국 그리고 중국-냉전시기 한국인의 중국인식』, 해안, 2019.

¹⁶ 전해중·민두기, 『일본사』, 1964.

되면서 주도권은 유럽 중심의 역사 인식을 견지한 자유주의 계열에게 넘어왔다.¹⁷ 이러한 정국 변동은 서구 중심의 역사 서사가 주류로 부각되면서 탈식민 과제도 민족 문제의 해결보다는 經濟成長·近代化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동양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인 담론은 歷史敍事 자체의 모순을 擔持하고 있어 동양사는 1955년 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독자적인 교과서로 존속할 수 없게 되었다. 물론 세계의 역사를 통합적으로 학습하여 보다 폭넓은 역사적 시각을 가지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역사를 좀 더 객관화하여 심화, 이해하도록 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임을 부인하기 힘들다.¹⁸ 그러나 동양사 즉 중국사에 대한 편견이 강하게 작용하였다. 역사적 맥락은 다르지만 大韓帝國期 二分主義로 돌아간 셈이다. 그리하여 중국 중심의 동양사는 □세계사□에 포함되었다. 더욱이 동양사가 세계사에 편입됨으로써 서구중심적 관점이 심화되었다.¹⁹ 물론 서구중심적 관점은 일제강점기 이래 견지되어 왔다. 그러나 일본사 중심의 동양사가 한편으로 존속하였기 때문에 서구 중심의 역사교육을 견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동양사가 독자성을 상실함으로써 서구 중심의 역사 서사 구성이 독점을 하기에 이르렀다. 분량이 단적으로 보여준다. 동양사 분량이 30퍼센트에 불과한 데 반해 서양사 분량은 70퍼센트를 상회했다. 이러한 과도한 불균형은 세계의 역사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폭넓은 역사적 시각을 견지한다는 취지에도 위반된다.

따라서 서구중심적 관점에 입각한 세계사에 중국사는 하위 구성으로 들어갔다. 물론 일본사도 이러한 세계사 서사의 하위에 배치되었다. 제1차 교육과정에서 세계사 구성에서 일본사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아시아 세력의 팽창과 유럽 사회의 형성

- (1) 이슬람 세계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 (2) 당, 송 시대는 어떠했는가?

¹⁷ 후지이 다케시, 「제1공화국의 지배 이데올로기-반공주의와 그 변용들」, □역사비평□ 83, 2008, 140~142쪽.

¹⁸ 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 편, □한국교과교육과정의 변천—중학교□,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0, 96~97쪽.

¹⁹ 남한호, 「제1차 교육과정 세계사 서술체제와 내용분석」, □역사와교육□ 22, 2016, 143~145쪽.

(3) 몽고와 일본은 어떻게 발전하였는가?

5. 근세 동양은 어떠했는가?

(1) 명, 청의 중국은 어떠하였는가?

(2) 서남 아시아의 변동은 어떠했는가?

(3) 서양 세력은 어떻게 아시아에 침입하였는가?

(4) 근세 일본은 어떻게 변천하였는가?

(5) 동양 각국의 서로의 관계는 어떠했는가?

고등학교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비록 일본사의 분량이 중학교에 비해 늘어났지만 서양사 중심의 세계사 속에서 중국사의 하위 범주로서 단편적인 시대 개관이 뒤따랐다.²⁰

그럼에도 이러한 자유주의는 李承晩 대통령의 權威主義에 맞서 4·19혁명을 끌어낼 수 있는 지적 자양분으로 작용하였다. 다만 그것은 후진성론에 근간하였기 때문에 韓日 國交正常化를 앞두고 재차 제기된 탈식민 과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

한편, 한국사 내부에서도 植民史觀 문제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종래 우리나라의 역사는 일본인 학자들의 식민사관으로 왜곡 해석된 것이 많았다는 인식 아래, 1958년 말 이승만대통령의 지시로 국사상의 제반 문제들을 검토하고 1집에서 6집까지 발행되었다.²¹ 집필은 고대(단군조선-신라) 李弘植, 중세(고려시대) 金庠基, 근세전기(조선 太祖-宣祖) 申錫鎬, 근세후기(光海君-哲宗) 李丙燾, 최근세(고종-8·15해방) 李瑄根이다. 식민사관 문제를 최초로 다룬 일련의 특집이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가 1960년 정·부통령선거를 앞두고 야당의 언론을 제한하고자 하여 1958년 11월 개악된 國家保安法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승만 대통령의 식민사관 문제제기는 위기 국면을 호도하려는 政治的인 修辭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당시 야당을 대변했던 口京鄉新聞은 12월 21일자 사설에서 新國家保安法 투쟁을 두고 “倭政植民政策下에도 우리 민족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殺身成仁한 愛國憂國之士를 따라 투쟁할 것을 역설했던 것이다.²² 결국 이승만 대통령의 이러한 제의는 1950년대 연구 성과가 거의 없어 정치

²⁰ 이해남, 『고등학교 사회과 세계사』, 1959, 탐구당 ; 김성근, 『고등 세계사』, 교육사, 1961.

²¹ 국사편찬위원회 편, 『國史上의 諸問題』 1, 1959, 1~2쪽.

²² 「사설 「마음의 조국」을 이 땅 위에 성취하자」, 『경향신문』 1958.12.21.

적 口頭禪에 그치고 말았다. 그럼에도 1965년 韓日國交 正常化를 전후하여 이 문제가 다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4. 韓日關係의 새로운 摸索과 韓國史의 體系化 문제: 1965~1981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는 한국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당시 군사 정부는 미국의 지지의 얻고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을 끌어들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였다. 그 무렵 미국은 北方社會主義圈에 대항하는 親美 反共의 방과제를 구축한다는 동북아 지역 통합전략을 마련하고 강력한 ‘한·미·일 삼각안보체제’를 구축하려 했다. 그러려면 한국에 강력한 반공 정부가 필요했고 무엇보다 한일국교정상화가 필요했다. 미국의 이러한 동북아 정책으로 일본은 동북아에서 지위가 높아졌으며 한국전쟁 特需로 벌어들인 과잉자본을 한일국교정상화를 통해 해소할 수 있었다. 또 군사정부는 미국의 지지를 얻어내고 경제개발에 들어갈 자금과 기술을 끌어들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군사 정부의 이러한 對日政策은 학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리하여 미국의 제3세계 대외정책을 뒷받침하는 로스토우 근대화론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한편²³ 한국사학계를 중심으로 한일 회담을 전후하여 일본의 재등장에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1965년 7월 9일 韓國史學會의 대표간사가 중심이 되어 한일회담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서 여러 역사관련 학회에서 한일협정 조인을 백지로 돌릴 것을 정부에 촉구하였다. 한일협정은 互惠平等의 원칙에 선 조약이 아니라고 못박았다.²⁴ 그 결과 민족문제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었고 국문학, 국사학의 독자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당시 서양사 위주의 세계문화사가 대학의 교양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어 주류를 차지하는 가운데 한국사 연구자의 양성이 긴급한 과제로 제기되었다.

특히 역사교육 현장에서 제2차 교육과정에 따라 한국사와 세계사를 합쳐서 가르치는 것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았다.²⁵ 統合社會의 원리에 따라 사회 교과 속에서 국사와 세

²³ 朴泰均, 「로스토우 제3세계 근대화론과 한국」, 『역사비평』 66, 2004, 156~159쪽 ; Michael E. Latham, 권혁은 외, 『근대화라는 이데올로기』, 그린비, 2021, 95~97쪽.

²⁴ 「역사연구 역사학회 한국사학회 비준반대성명」, 『동아일보』 1965.7.10.

²⁵ 康宇翊 외, 「지상좌담 개정된 교육과정과 역사교육의 제문제」, 『역사교육』 9, 1966, 167~169쪽.

계사를 통합시켰을뿐더러 세계사의 분량을 대폭 축소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서양사 중심의 세계사가 국사에 첨가되는 형태여서 중국사는 물론 일본사 역시 그 乏盡을 면치 못했다. ‘근세 세계의 생활’은 60쪽에 불과한 가운데 중국과 일본은 단 6쪽에 지나지 않았다.²⁶ 여기에는 명의 흥망, 명대의 문화, 청의 통일관 발전, 청대의 문화, 인도의 국내 대립, 일본의 바쿠후 정치,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포함되었다.

한편, 한국사학의 주류가 여전히 식민사관에 의해 체계화되었다는 주장이 잇달아 제기되었다.²⁷ 그리하여 1967년 12월 韓國史研究會가 발족되었다. 발기 취지문에서 “한국사를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한국사의 올바른 체계를 세우고, 아울러 한국사로 하여금 세계사의 일원으로서 그 정당한 위치를 차지하게끔 하는 일”이라고 단언했다.²⁸ 이어서 1969년 12월 李基白, 李佑成, 韓洵, 金容燮이 문교부에 <중·고등학교 국사교육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을 연구 보고서로 제출하여 국사교육의 개선을 역설하였다.²⁹ 이는 한국사가 세계사의 하위 범주가 아닌 독자적인 분야로서의 자기 모색을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그리하여 서양사 中心·중국 副中心의 세계사와 함께 독자적인 한국사라는 양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역사 서사의 한축을 이루었던 한국사는 1968년 12월 「國民教育憲章」 선포와 1972년 10월 維新體制 起點을 전후하여 민족 주체성의 확립을 내세워 변질되기 시작하였다. 한국사가 社會科로부터 독립되었지만 세계사는 여전히 社會科 속에 편제된 가운데 한국사는 정권에 의해 ‘강요된 重視’를 당했고 국사와 세계사의 간극이 벌어졌다.³⁰ 상호 연계될 수 있는 여지가 점점 줄어들은 셈이다.

이 과정에서 동양사 연구자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全海宗의 경우, 한일국교 정상화를 앞두고 일본사에 대한 無知와 破片化된 인식을 비판하면서 1964년 閔斗基와 함께 日本史를 출간하였다. 한국인이 최초로 저술한 日本通史였다. 전해

²⁶ 박성봉 외, 『새로운 사회』, 흥지사, 1970.

²⁷ 金哲垸, 「국사교과서는 바뀌어야 한다」, 『새한신문』 1968.11.11.

²⁸ 韓國史研究會 홈페이지 <https://www.hanguksa.org/front/introduce/history/view?id=102&page=3>.

²⁹ 李基白·李佑成·韓洵·金容燮, 「중·고등학교 국사교육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1969, 문교부연구보고서, 4쪽.

³⁰ 金泰雄, 『國史教育의 編制와 韓國近代史 探究』, 선인, 2014, 23~25쪽

좋은 다음과 같이 출간의 취지를 밝히고 있다.

고대 이래 일본은 우리나라를 통하여 대륙의 문화를 받아들였다. 일본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은 壬辰倭亂과 韓日合邦 이후의 일본의 식민지정책 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쓰라린 과거는 과거로 돌리고 일본을 이웃한 우방으로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하게 되었다.

이렇듯 중요한 일본의 역사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을 아는가를 자문해 볼 때, 상식 이상을 안다고 대답할 수 없다. 해방이 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일본사를 한 책도 내지 못한 것은 우리 史學界의 부끄러운 일이라 하겠다. 물론 역사책을 저술한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일본사를 알아야겠다는 의욕에서 이 책을 엮게 되었다.

요즘은 한일 국교 문제로 어느 때보다도 일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는 독자에게 일본의 여러 분야의 모습을 역사적으로 본 후에 올바른 日本觀을 가지기 바라는 바이다.³¹

한일 국교정상화를 앞두고 식민사관 극복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이웃 나라 일본의 역사에 대한 이해가 절실함을 역설하고 있다. 시대구분은 ‘고대일본’-‘중세일본’-‘근세일본’-‘근대일본’-‘현대일본’(제1차 세계대전부터)으로 구성하였다. 일본 내부의 발전 과정에 입각하여 시대를 구분한 것이다.

나아가 전해종은 ‘主體性’과 ‘民族性’에 대한 과도한 강조를 비판하면서 동양사와 국사의 연관성을 넘어서서 동양사도 하나의 지식체계로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³² 또한 閔斗基의 경우, 동양사회(중국의 경우) 근대화가 서구적 충격에 피동적으로 끌려감으로써 전통의 단절을 초래한 西化가 아니라 紳士階層이 서구의 충격에 대결, 전통에 입각하여 주체적으로 창조해낸 自生的過程이라는 주장을 펼쳤다.³³ 黃元九의 경우, 국가정책에 호응하는, 민족적 감정을 반영하는 동양사학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일본 또는 중국을 편견없이 볼 수 있는 역사가적 주체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많은 연구자들

³¹ 全海宗·閔斗基, 『일본사』, 知文閣, 1964, 1쪽.

³² 全海宗, 「동양사교육의 문제와 방향」, 『역사교육』 14, 1971.

³³ 민두기, 「두개의 중국론-역사적 배경과 문제의 초점」, 『2세대』 4-7, 1966.7; 金衡鍾, 「故 閔斗基先生の學問的業績」, 『東洋史學研究』 74, 2001; 정문상, 「中共'과 '中國' 사이에서 -1950~1970년대 대중매체상의 중국 관계 논설을 통해 보는 한국인의 중국인식」, 『동북아역사논총』 33, 2011, 70쪽.

이 전통의 단절이 아니며 자생적이라는 데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³⁴

따라서 유신체제 하에서 歷史敍事는 국사와 세계사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세계사는 서양사 中心과 중국사 副中心으로 고착화되었다. 특히 한국사는 ‘한민족의 주체적인 발전사’, ‘세계사적 차원의 인식을 통한 민족사적 특성 파악’ 등 ‘민족사관 교육’을 지향하는 일반 목표와 달리, 학년 목표와 단원 목표에서는 國難克服의 民族精神만이 중시되었다. 그리하여 중국사, 일본사 등의 연계성은 오로지 전쟁을 매개로 이루어졌다.³⁵

5. 韓日 歷史葛藤과 民主化運動의 連鎖 : 1982~2001

역사서사의 二元的인 구성은 1982년 한일간의 역사 갈등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1986년 6월 일본 정부가 발표한 고등학교 역사교과서검정 결과와 관련해서 한반도와 중국에 대한 ‘침략’을 ‘진출’로, 3·1운동을 ‘폭동’으로 바꾸는 등 표현이 수정되고 3·1운동으로 인한 한국인 사망자가 7,000명이라는 부분도 삭제되었다는 내용이 일본에서 보도되었다.

그러나 5·18민주화 운동을 암살하면서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로서는 경기 침체로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일본 교과서의 역사 왜곡 보도를 통제하였다. 그것은 무엇보다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들여와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신군부 정권의 희망과 달리 신군부 정권에 ‘안보 경제 협력 차관’을 빌려 줄 수 없다고 통보해 오면서 사정이 180도 달라졌다. 이에 신군부 정권은 국민들의 反日 感情을 지렛대로 삼아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를 전면화시켰다. 7월 하순부터 한국은 중국의 언론들과 함께 일제히 일본의 역사 왜곡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반면에 일본 정부는 역사교과서 검정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며 검정 결과가 다른 나라와의 우호관계를 해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안이한 태도를 보였다. 심지어 국토청 장관이 ‘內政干涉’이라고 발언하여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³⁴ 「低邊이 없는 東洋史研究 「反省과 課題」 심포지움에서」, 『京郷新聞』 1970.3.31.

³⁵ 차미희, 『한국 중·고등학교의 국사교육-국사과 독립 시기(1974~1894)를 중심으로』, 교육과학사, 2011, 50~52쪽.

결국 때마침 도래한 신 냉전체제로 인해 미국은 한일간의 이러한 갈등이 자국의 동아시아 정책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고 미국 레이건 행정부의 주도 아래 일본 정부는 신군부 정권과 밀실 타협을 통해 40억 달러 차관을 제시했고 이듬해 1월 나카소네 총리의 방문 기간에 이 문제를 매듭지었다.³⁶ 이에 나카소네 총리는 공식 방한 중 청와대 만찬사(1983.1.11.)에서 한일 양국 사이에서 과거 불행한 역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우리는 이것을 엄숙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이 1984년 9월 일본을 방문했을 때 나카소네 총리는 오찬사에서 금세기의 한 시기에 일본이 한국과 한국 국민에게多大한 고난을 끼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되새기고, 장래에 이런 일이 없도록 굳게 결의한다는 뜻을 표명했다. 신군부 정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둔 셈이다.

그리하여 신군부 정권은 중국과 달리 反日의 기치를 克日의 기치로 전환시켰고 독립기념관은 그렇게 해서 건립되었다.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과 한국민의 반일 감정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정권 기반을 강화시킬 수 있었다. 일본 정부 역시 1982년 11월 교과서 검정 기준에 ‘近隣 아시아 여러 나라와의 근현대 역사를 다룸에 있어 국제이해와 국제협조라는 견지에서 필요한 배려를 할 것’이라는 조항을 추가했다.³⁷

나아가 신군부 정권은 이처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자마자 일본 역사 교과서 규탄 토론회를 주도한 학생들을 반국가단체 구성 사건으로 엮으려고 하였다.³⁸ 신군부 정권이 자신들의 정통성을 비판하는 학생운동권을 섬멸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타협은 미봉책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언제든지 한일간의 역사갈등은 再燃될 여지가 많았다. 당시 한국 사회가 신군부 정권의 탄압 아래 절차적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요구 사항이 제대로 분출될 수 없었다. 다만 이후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역사인식의 차이를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1988년 盧泰愚 정부의 탄생은 이전의 全斗煥 정부와 다소 상이한 국면과 연계되었다. 즉 노정부는 신군부 세력에 기반하고 있지만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으로 직선제 개헌을 거쳐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에 절차적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

³⁶ 조세형, 『한일관계 50년, 갈등과 협력의 발자취』,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14, 107~108쪽.

³⁷ 정재정, 『한일의 역사갈등과 역사대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14, 49쪽,

³⁸ 徐京錫, 「1982년 일본 교과서 四科 공개 토론회를 돌아보며」, 『歷史科 60년사』(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과 편), 2007.

었고 냉전 종식에 힘입어 한일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1980년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었던 일본군 ‘慰安婦’ 문제가 공론화될 즈음 1990년 6월 일본 정부가 ‘일본군은 군대위안부 문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발표하자 金學順(1924~1997)이 1991년 8월 女性誌가 아닌, 신문과 미디어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의 실상을 폭로하였다. 私的인 雜談에서 公共의 記憶으로 올라간 것이다. 이러한 폭로는 한국사회의 민주화가 상당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人權意識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역시 1993년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장관의 성명을 통해 일본군이 일본군 ‘위안부’ 모집·배치·이송·관리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김영삼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의 참상을 일본교과서에 기술함으로써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1997년부터 일본의 중학교 역사교과서에는 한두 줄이나 모두 일본군 ‘위안부’에 관해 기술했다.

물론 일본의 보수 우파 세력은 일본군 ‘위안부’의 취급에 대해 맹렬히 반발했다. □새 역사교과서□는 그렇게 해서 탄생했고 한일간의 역사갈등을 재연시킬 수 있는 불씨가 되었다. 그럼에도 2001년 10월 15일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역사 갈등에 대응하는 방안의 하나로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데 합의했다. 2002한일 공동월드컵 개최를 앞에 둔 시점이었다.

6. 한국의 政治的 民主化 道程과 <동아시아사>의 탄생 : 2002~현재

1998년 金泳三 정부가 막을 내리고 金大中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관계가 개선되었고 한일 관계도 새로운 국면도 맞았다. 특히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함께 발표한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21C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으로서 1965년 한일 관계 정상화 이후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킨 획기적 선언으로 평가받는다. 오부치 총리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 한국 국민에게 커다란 고통을 준 사실을 받아들이며 ‘痛切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했다. 한일 외교 사상 처음으로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반성과 사죄가 공식 합의문서에 명시됐다. 한국 정부는 이 선언에 따라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단행했다. 일본 영화가 수입된 것도 이때부터다.

이에 발맞추어 韓日歷史共同研究委員會는 양자 간의 차이를 인식하고 상호 이해할 수

있는 논점을 수렴했다. 특히 自國史를 상대화하여 파악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한국과 중국, 일본으로 구성되는 동아시아의 역사를 매개 고리로 삼아 자국사와 세계사를 연결시키는 수준으로 나아갔다.³⁹ 그리하여 중국과 일본도 이런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공유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갖기에 이르렀다. 역사 서사의 재구성 문제가 전면으로 부각된 셈이다. 그 결과 2005년 한·중·일 공동의 동아시아 근현대사가 탄생했다.⁴⁰ 한·중·일 3국이 공동으로 기획하고 집필하여 동시에 출판하는 최초의 동아시아 공동 역사 교재이다.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에 반대하는 각국의 학자, 교사, 시민활동가 등이 4년 동안 머리를 맞대고 단어와 문장을 꼼꼼히 검토하여 저술한 이 책은 19세기 중엽 이후 침략과 전쟁으로 얼룩졌던 과거의 역사를 깊이 반성하고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동아시아의 미래를 지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아가 偏狹한 國粹主義 시각에서 탈피하여 20세기 侵略과 抵抗의 역사에 대한 동아시아 공동의 인식을 만들어내고자 한 점이 이 책의 특징이다. 특히 1930년대에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일으킨 전쟁을 다루는 장의 제목을 ‘일본 민중의 가해와 피해’, ‘일본의 침략 전쟁 패배’ 등으로 표기하고, 이러한 見地에서 일관되게 역사를 서술한 점이 눈에 띈다. 終章 ‘동아시아의 평화로운 미래를 위하여’도 주목할 만하다. 이 장에서는 각국의 과거사 청산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와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 등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

한편, 2003년 중국의 이른바 東北工程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었다. 우선 2004년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에 공식 항의했으나 중국은 동북공정을 중단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그 성과물의 대중화에 박차를 가했다.⁴¹ 이에 한국 정부는 2004년 3월 高句麗研究財團을 설립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갈등 사태는 한·일, 한·중의 관계를 넘어 동아시아사 전체로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자국 중심의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평화와 공존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면서 논의의 外延이 넓어졌다. 그 결과 일본에서는 역사 왜곡 교과서의 대표로 알려진 후쇼사 교과서의 채택율이 현저히

³⁹ 趙光, 『韓國史學史의 認識과 課題』, 景仁文化社, 2010, 281~283쪽; 정재정, 앞의 책, 132~133쪽

⁴⁰ 한중일3국공동역사편찬위원회, 『미래를 여는 역사 : 한중일이 함께 만든 동아시아 3국의 근현대사』, 한겨레출판, 2005.

⁴¹ 동북아역사재단, 『갈등을 넘어 화해로』, 2006, 34~39쪽.

낮아졌으며 한국에서는 동아시아사 교과서 개설이 교육과정 개정의 뜨거운 의제로 부각되었다.⁴²

나아가 盧武鉉 정부 하에서 이른바 ‘東北亞 均衡者’라는 개념이 도출되었다. 즉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로 발전해 나아가야 하며 그 선도적 역할을 한국이 하되 불안정하고 불투명한 이 지역에서 葛藤을 和解로, 對立을 協力으로 轉化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주체적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아울러 탈국가주의에 입각한 동아시아담론과 함께 도출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⁴³

또한 학계에서도 동아시아사 서술의 방법과 인식 문제에서 많은 진전이 이루어졌다. 1990년대 脫冷戰과 포스트 모더니즘의 등장 속에서 국가와 민족을 넘어 유럽 중심의 세계사를 상대화하고 성찰할 수 있는 方法이자 範疇로서 地域史가 주목되기 시작하였다. 동아시아사라는 지역사가 자국사와 세계사 사이에 위치한 중간 단위의 역사적 사고체계로서 양자를 긴밀히 연결하고 소통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⁴⁴

이러한 進展은 한국 사회가 절차적 민주주의에 돌입하였고 경제력과 군사력이 상당 수준에 올랐기 때문에 가능했다. 특히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 시점과 달리 식민사관을 극복할 만한 연구 역량이 축적되어 중·일의 역사 왜곡에 맞서 대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즉 민주화, 경제력, 연구 성과가 이러한 동아시아 교과서를 탄생시킨 주된 요인이라고 하겠다. 그리하여 2007 교육과정에서 동아시아 3국 가운데 고등학교에서 최초로 학습하는 <동아시아사> 과목이 탄생하였다. 그것은 제1차 교육과정 시기를 거치면서 이른바 한국사-세계사라는 이분주의가 해체되고 이제 다시 삼분주의로 회귀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러한 삼분주의는 해방정국에서 견지했던 삼분주의와는 달랐다. 즉 후자가 기존의 식민사관에서 탈피하지 못한 한국사, 유럽 중심의 서양사, 중국 위주의 동양사였다면 전자는 식민사관에서 탈피한 한국사, 교류와 교역 중심의 세계사, 동아시아 3국의 연계성이 강화된 동아시아사로 정립되었다. 그 결과 ‘동아시아사’ 과목의 교육 목표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개된 인간 활동과 그것이 남긴 문화유산을 역사적으로 파악하여 이 지역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나아가 지역의 공동 발전과 평화를 추

⁴² 지모선, 「<동아시아사> 과목의 신설과 교육과정 개발」, 『역사교육』 128, 2013, 72~73쪽.

⁴³ 한국동북아지식인연대 편, 『동북아공동체를 향하여』, 동아일보사, 2004.

⁴⁴ 白永瑞, 「자국사와 지역사의 소통: 동아시아인의 역사서술의 성향」, 『역사학보』 196, 2007, 105~106쪽; 柳鏞泰, 『동아시아사를 보는 눈』,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68~76쪽.

구하는 안목과 자세를 기르는” 것이다. 특히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동아시아인이 성취한 문화의 공통성과 상관성을 탐구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발전과 평화 정착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질을 기르도록 하는 데 주안을 두었다. 물론 이러한 구성 방식의 세계사 교육과 동아시아사 교육의 지향과 실제 적용의 괴리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⁴⁵

그럼에도 한국의 □동아시아사□ 교과서 출간을 전후하여 한국은 물론 중국, 일본에서 학계와 역사교육 현장 차원에서 이러한 지역사 방법론에 입각하여 저술된 다수의 동아시아사·한일관계사 개설서·교재가 속출하였다.⁴⁶ 이러한 노력은 한중일 삼국의 역사 서사 구성에서 지속적이고 의미있는 변화를 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되리라 전망된다.

7. 結語

현재 한국에서는 교육과정이 新自由主義의 潮流 속에서 시장 수요에 따라 심각하게 搖動치고 있으며 교과목이 이에 따라 明滅하는 까닭에 □동아시아사□ 교과서의 운명은 불투명하다. 무엇보다 □동아시아사□는 □세계사□와 함께 투입된 시간에 비해 가장 낮은 점수를 받는 입시 과목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한중일 삼국 앞날에 暗雲의 그림자를 드리운다 하겠다. 상호 간의 이해가 지속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확보·유지되지 않는 한, 갈등을 넘어 화해로 나아가는 것이 遼遠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가 간 대화를 통한 해결이 難望한 가운데 정치가 상호 이해의 폭을 확장하기는커녕 협소하게 만드는 현금의 사태는 매우 우려할 만하다. 따라서 정치적 격랑에 휘말리지 않고 근대 세계 및 글로벌화한 세계를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상대방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歷史 敍事를 재구성하는 작업이 학계와 학계, 교육현장과 교육현장, 시민단체와 시민단체의 만남과 교류, 공유를 통해 지속적으로 유지·확산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노력만이 새로운 대화를 위한 디딤돌을 놓을 수 있기

⁴⁵ 梁豪煥, 「세계사교육 : 변화의 담론과 교과서 서술의 현실」, □역사교육□ 140, 2016; 柳鏞泰, 「동아시아와 세계사, 왜 무엇을 가르치나? - '농업 패싱'의 교류사를 묻는다」, □역사교육□ 164, 2022.

⁴⁶ 최근의 대표적인 성과로 吳炳守 編, □한중 역사교과서 대화 : 근대의 서사와 이데올로기□, 동북아역사재단, 2021; 전국역사교사모임·한국 | 역사교육자협의회·일본, □마주보는 역사수업: 한일 교사들의 연대와 교류의 기록□, 휴머니스트, 2023을 들 수 있다.

때문이다.⁴⁷

■ 김태웅 (金 泰雄 / KIM, Taewoong)

1984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졸업. 1990년 서울대 대학원 국사학과 석사, 1997년 서울대 대학원 국사학과 박사과정 졸업. 문학박사. 현직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교수. 전문분야는 한국근대사, 한국사회경제사.

주요 저작 : “뿌리 깊은 한국사 샘이 깊은 이야기 6--근대편--”, 솔, 2003. “한국근대 지방재정 연구”, 아카넷, 2012. “대한제국과 3·1운동”, 휴머니스트, 2022.

⁴⁷ 곤도 다카히로, 박경희 옮김, 『역사교과서의 대화』, 역사비평사, 2006, 7~11쪽.